

與 “의혹일 뿐” 野 “거짓 해명”... 양평고속도 특혜 공방

국토부 자료 공개 놓고 격돌 국힘 “외압·사전공모 없었다” 민주 “사업 백지화 결정 위법”

여야는 24일에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날선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추진 과정 등의 자료를 일방에 공개한 것과 관련, “노선 변경에 외압, 사전공모, 특혜 어느 것 하나도 없었다”며 “근거 없는 야당의 거짓 주장이 맞는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부의 답변이 맞는지 검증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결정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오죽 답답했으면 전례 없이 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 중단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더불어민주당의 근거 없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중단됐다”며 “민주당은 온갖 근거 없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설명에도 귀를 닫고 그저 선동만 몰두해 국민에게 피로감을 안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관계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외압을 행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한다”며 “사전에 설계업체와 모의를 한 적도 없고, 만에 하나 그랬다면 그건 공무원이 아니라 범죄 집단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에 고속도로 중점이 생길도록 특혜를 시도했

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엔 “그 토지는 보존종지인 관리지역이고, 규제 지역에 포함돼 용도 지역 변경이 어렵고 개발행위가 극히 제한된다”며 “이런 곳에 무슨 아파트 100채, 300채를 개발할 수 있다는 괴담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뻔뻔하게 펼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진실 앞에 민주당이 할 일은 공개 사과뿐’이라며 ‘대체 이보다 더 어떻게 증명해야 민주당은 거짓 선동을 중단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역시 프레임에서 나와 진정 의혹을 제기하고 싶다면 자료를 토대로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확인하라”며 “국민들이 모든 상황과 공개된 자료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엄연한 불법으로 3개 법률과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 장관 결정에 대해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려 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 50조,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 도로법 5조 7항 및 6조 8항,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교통개선대책을 바꿀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3조 3항 및 7조의2 3항을 각각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원 장관은 즉각 백지화를 철회하라”면서 “원 장관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영부인 일가가 아닌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을 위해 원안대로 사업을 신속히, 정상적으로 추진하라”고 했다.

국토부 설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짚으며 이에 대해서도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주장한 국토부의 5가지 의혹은 ▲국토부와 용역사가 원하는 노선만 선택적으로 분석했다는 의혹 ▲원안 노선에 강하IC를 설치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왜곡했다는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해명이 거짓이라는 의혹 ▲새 종점 적용 시 사업비가 3천억원 증가한다는 의혹 ▲국토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자료가 사실은 존재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원 장관과 국토부의 이런 행태는 국정조사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면서 “이런 행태가 지속될 경우 국정조사를 넘어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영록 지사 ‘호남 정치 지도자’ 기반 마련

리얼미터 이어 갤럽 여론조사 1위 민선 8기 들어 1년간 선두 강기정 시장은 50% 공동 9위

김영록 전남지사가 올 상반기 한국갤럽의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 수행 평가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서 민선 8기 들어 1년간 압도적인 격차로 1위를 한 것에 이어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민선 7기 이후 오랜 기간 도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호남의 정치 지도자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전남도 행정부지사, 재선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남지사에 이르기까지 중앙·지방 행정 및 정치를 두루 섭렵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장점이 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월 전국 만 18세 이상 2만 4029명을 대상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직무 수행 평가를 한 결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62%의

긍정 평가를 받아 1위를 기록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21년 하반기 때 71%의 긍정 평가를 받은 것에 비해 긍정 평가가 다소 낮아진 했지만 여전히 전국 광역단체장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철우 경북지사(61%), 홍준표 대구시장(59%)이 긍정 평가 2위, 3위를 나타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경우 50%의 긍정 평가를 받아 공동 9 등이었다. 김 지사는 뛰어난 업무 파악 능력, 정책 및 사업 입안·추진에 있어서의 자신감, 현장 및 조직 내 원활한 소통 등으로, 도민, 향우, 공직자 등으로부터 두루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RDD(무작위 번호 걸기)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5% 포함)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평균 응답률은 9.5%, 표본오차는 17개 시도별 95% 신뢰수준에서 ±1.2~7.9% 포인트다. 앞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리얼미터가 매달 전국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지도 평가에서 민선 8기 1년 연속 1위를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김영록 전남도지사

“尹 장모 징역 1년은 솜방망이 처벌”

민주 최고위, 잔고증명 위조 비판... “대통령실 대국민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법정 구속된 데 대한 비난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정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상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일반 상식의 눈으로 봐도 최 씨의 징역 1년은 봐준 흔적이 역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최 씨의 법정구속에 대해 책임 있게 입장을 내고, 대국민 사과하라”며 “그게 국

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검찰이 (최 씨를) 사기죄로 기소하지 않았다”며 “이 정도 내용이면 최소 3, 4, 5년의 징역형은 받아야 하는데 깃털처럼 가벼운 형량이란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검찰이 수상하다. 사기 혐의까지 적용되면 형량이 훨씬 높았을 것”이라며 “정경심 씨는 표창장 위조로 4년형을 받았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안 의원은 이번 사건을 ‘최순실 국정농단’에 빗대 “지금 국정농단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데, 국정농단의 싹을 자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저는 그 분(최 씨)을 보면 최순실 씨가 많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대통령 입장이 나와야 한다”며 “묵묵 부답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풍수지리가인 백재현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가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간 정황이 포착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야 ‘국회의원 코인 보유’ 신경전

민주 “권영세 이해충돌 여지” 국힘 “김남국 몰타기 안돼”

여야는 24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국회의원 11명이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리심사자문위가 현 통일부장관인 권영세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장관

은 재직 중 남북 관계가 최악의 피탄 지경에 이르렀던 동안 개인 돈벌이를 위한 코인 거래만큼은 차질 없이 진행했다”며 “경악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여야가 검토 중인 국민권의원회의의 가상자산 보유 관련 전수조사까지 여당에 압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자진 신고로 드러난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가 ‘김남국 사태’의 몰타기가 되어서 안 된다는 입장이다. 권 장관은 “범죄적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다(김남국 의원과) 같은 취급할 일은 아니다”라며 “야당에서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여론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블록체인 기술이 한국정치에 미치는 영향’ 토론

양향자 의원, 국회서 간담회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무소속 양향자(서구) 국회의원 24일 국회에서 ‘웹 3.0시대 민주주의와 당의 미래’ 특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동주최자인 ‘Korea CEO Summit’의 박봉규 이사장을 비롯해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한국블록체인학회)를 좌장으로 김형주(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김형중(사)한국핀테크학회 회장, 박성준(사)한국블록체인연협회 회장, 이정엽(사)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최수혁(사)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회장 등 국내 블록체인 산업계를 이끌어 가는 주요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양향자 한국외국어대 창당준비위원장의 ‘블록체인 기술이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 발제 후 패널 토론, 기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양 의원은 발제에서 “정치 불신을 넘어 정치 부재

의 시대다. 현 정치세력 모두가 국민에게 외면받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 신당 창당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48%가 필요하다고 했고, 29%가 지지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이 그 증거”라며 현실 정치 상황을 진단하고, “당내 선거의 금품 전달, 밀실·비락 공천, 비민주적 의사결정 등 더 이상 정당의 운영을 사람의 ‘선한 의지’가 아닌 불투명·불합리·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완전 차단하는 ‘선한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희망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 자율적 정당’을 목표로 한다. 투명성, 불변성, 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를 활용해 차별없이 당을 이끌겠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양향자 의원, 국회서 간담회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